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허재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 (jcheo@kiep.go.kr, Tel: 044-414-1042)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jhpak@kiep.go.kr, Tel: 044-414-1285)

이한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leehn@kiep.go.kr, Tel: 044-414-1288)

차 례

1. 개요
2.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3. 시진핑 3기의 통치 엘리트
4.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당대회 업무보고]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20차 당대회에서 업무보고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냄.
 - 당대회에서 통과된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밀 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중국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란 '중국식 현대화'이고, 현대화 강국의 분야로 제조·품질·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 강국 등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을 통해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함.
- ▶ [지도부 인선]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측근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며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함.
 - 올해 69세인 시진핑이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서 '7상8하'의 인사 관례는 깨졌고,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 체제로 전환됨.
 - 시진핑 3기의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 [전망 및 시사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제시한 '강국전략'에 따라 향후 중국이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맞춘 중국시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식 현대화의 요건인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한편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기반이라고 인식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한·중 간 공동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했고, 2049년이라는 통일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만큼 향후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큰바, 우리는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개요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 이하 20차 당대회)가 2022년 10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로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이 국가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만큼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대회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당대회는 약 9,700만 명의 공산당원을 대표하는 전국대표들이 5년마다 모여서 진행되는 중국공산당 최고 영도 기구의 위상을 갖는 회의로서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고 △당의 중대 문제에 대해서 토론 및 결정하며 △당장(黨章·당헌)의 수정, 그리고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
 - 당대회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폐회 기간에 당의 최고 영도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통 '중공중앙' 또는 '당중앙'으로 불림.
 - 중앙위원회는 대략 1년에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당의 중요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데, 특히 당대회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회의를 '중국공산당 ○○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기 1중전회)'라고 부르며, 1중전회에서 중국 통치 엘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위원(통상 25명)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7~9명), 총서기(1명)가 선출됨.

그림 1. 중국공산당의 주요 구성



주: 중국공산당의 일반 당원 수는 2021년 12월 기준이고, 각 기구의 인원수는 2022년 10월 26일 기준임.
자료: 중국공산당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당대회 업무보고] 10월 16일,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는 1시간 45분 동안 72쪽에 달하는 업무보고를 요약 발표하였으며 발전과 안전, 단결과 분투, 중국식 현대화 등을 강조함.

표 1.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의 구성

구분	제목
1장	지난 5년의 업무와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
2장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계 개척
3장	신시대, 신과정 중국공산당의 사명과 임무
4장	신발전 구도의 신속한 구축과 고질량(高品質) 발전의 추진
5장	‘과학기술·교육 흥국(科教兴国)’ 전략의 추진과 현대화 건설 인재 육성 강화
6장	전 과정의 인민 민주 발전과 인민의 주인 역할 보장
7장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国) 견지와 법치 중국 건설의 추진
8장	문화 자신·자강(自信自強)의 추진과 빛나는 사회주의 문화 조성
9장	민생 복지의 증진과 인민생활의 질 제고
10장	녹색발전 추진 및 인간과 자연의 조화·공생 촉진
11장	국가안전(안보)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 추진 및 국가안전(안보)과 사회 안정의 수호
12장	건군 100년의 분투 목표 실현 및 국방·군대 현대화의 새국면 개척
13장	일국양제의 견지·완비 및 조국통일 추진
14장	세계 평화와 발전 촉진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 추동
15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 견지 및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노정을 심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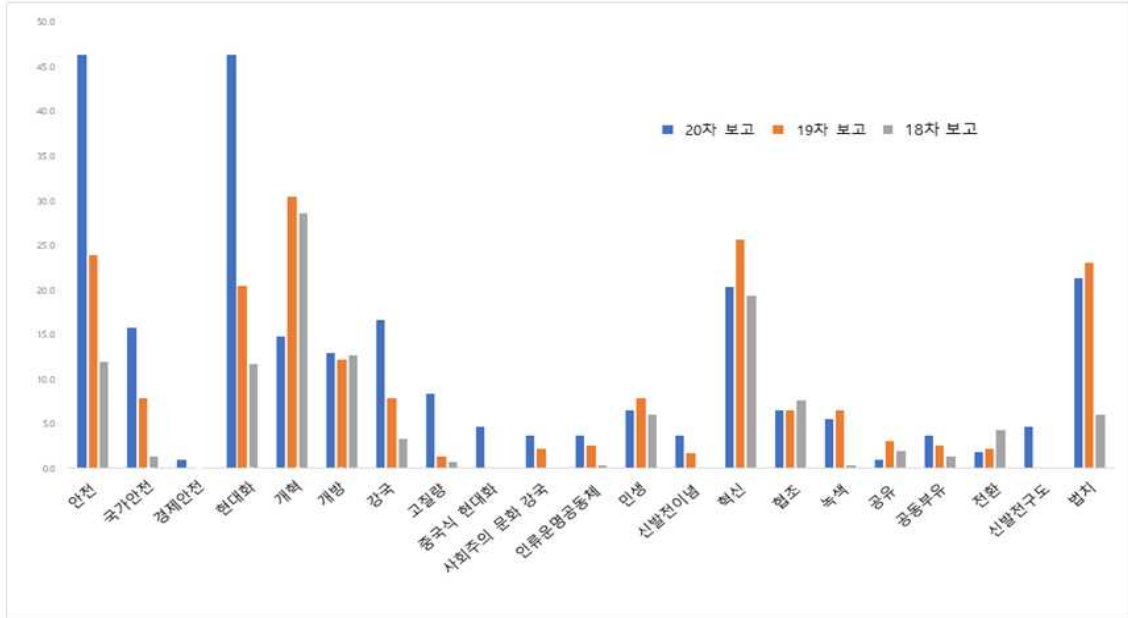
자료: 당대회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업무보고는 지난 5년 및 10년을 “이례적이고 순탄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백 년에 있을까 말까 한 대변화의 시기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 진입, 그리고 △빈곤 탈출 및 샤오캉사회(小康社会) 달성이라는 첫 번째 백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함.
- 동시에 향후 5년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중국식 현대화와 △여섯 가지 견지(坚持)¹⁾ △신발전 구도 △과학기술·교육 흥국(科教兴国) 전략 △인민 민주 △의법치국(依法治国) △문화 자신·자강(自信自強) △분배제도 완비 △녹색발전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 △신안전구도 △국방·군대 현대화 △일국양제(一国两制)·조국통일 △인류운명공동체 등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함.
 - 특히 ‘중국식 현대화’와 ‘경제안전(안보)’, ‘신발전구도’ 등이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고, ‘안전(안보)과 ‘현대화’, ‘강국’, ‘고질량(高质量)’ 등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으며, ‘개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인민자상(人民至上) 견지, 자신자립(自信自立) 견지, 정도와 혁신(守正创新) 견지, 문제 지향(问题导向) 견지, 체계적 관념(系统观念) 견지, 흥회천하(胸怀天下, 세계를 품다) 견지.

그림 2. 중국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키워드 비교(20차, 19차, 18차)

(단위: %)



주: 당해 연도 보고의 최대 출현 키워드인 '발전'을 100으로 한 비중임.
자료: 18·19·20차 당대회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업무보고의 핵심은 △중국이 달성해야 할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밀받침되어야 하며 △지금 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부 '단결'과 '분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임.
 -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거대 인구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 △사람과 자연의 공생 △평화 발전이라는 중국적 특성이 반영된 현대화라고 설명
 - 현대화 강국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조 강국과 품질 강국뿐만 아니라 우주·교통·인터넷·디지털·농업·무역·교육·과학기술·인재·사회주의 문화·체육 강국 등을 언급
 - '발전'이 국가부흥의 '제1임무'라고 하며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서 고품질(高质量) 발전과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함.
 - 두 번째 백 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 단결을 강조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 및 시진핑 측근의 최고 지도부 대거 입성에 대한 필요성 및 정당성의 논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인선]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진핑 3기가 시작되었고, 중국의 핵심 통치 엘리트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에 시진핑의 측근이 약진함.

- 당대회를 통해 제20기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과 후보위원 171명이 선출되었으며, 당대회에 이어 개최된 1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과 상무위원 7명, 그리고 시진핑이 총서기로 재차 선출됨.
- 시진핑(69세)이 연령 제한의 관례(7상8하)²⁾를 깨고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3연임을 확정했고, 공산주의 청년

2) 67세 이하는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 이상은 지도부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인사 관례.

단(공청단) 출신인 리커칭(李克强, 67세) 총리와 왕양(汪洋, 67세) 정협 주석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유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은퇴를 하게 됨.

- 새로 선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모두 이른바 ‘시자진(习家军)’으로 불리는 시진핑 측근으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중국정치의 집단지도 체제는 무너지고 ‘집중통일영도(集中统一领导)’ 체제로 전환됨.

표 2.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프로필

상무위원(7인)	출생지(출생연도)	학력	주요 직책(현직 또는 예상)	비고
 시진핑 (习近平)	陕西 (1953년생)	칭화대 학사 (화학공학) 칭화대 박사 (법학)	당 총서기 당 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유임
 리창 (李强)	浙江 (1959년생)	저장농업대 학사 (농기계) 홍콩이공대 석사 (공상관리학)	상하이시 당서기 국무원 총리(예상)	신임
 자오러지 (赵乐际)	陕西 (1957년생)	베이징대 학사 (철학)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예상)	유임
 왕후닝 (王沪宁)	山东 (1955년생)	상하이사범대 (간부학교 외국어 배양반) 푸단대 석사 (국제정치학)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정협) 주석(예상)	유임
 차이치 (蔡奇)	福建 (1955년생)	푸젠사범대 학사 (정치경제학) 푸젠사범대 박사 (정치경제학)	베이징시 당서기 중앙서기처 제1서기	신임
 덩쉐상 (丁薛祥)	江苏 (1962년생)	푸단대 학사 (행정 관리학) 푸단대 석사 (행정 관리학)	중앙판공청 주임 국무원 상무부총리(예상)	신임
 리시 (李希)	甘肃 (1956년생)	시베이사범대 학사 (중문학) 칭화대 석사 (공상관리학)	광둥성 당서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신임

주: 중국공산당 당내 직책은 당대회 및 1중전회 이후 바로 시작되고, 국가기관의 직책은 2023년 양회 이후 시작됨.
 자료: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공보(中国共产党第二十届中央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公报), 중국공산당 신문망(中国共产党新闻网), 바이두 사전(百度百科)을 참고하여 작성(2022. 10. 26 기준).

-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 연령이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10년 집권 연장을 가정했을 때, 포스트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o 다만 이번 인선에서 ‘7상8하’ 관례가 깨짐에 따라, ‘능상능하(能上能下, 능력에 따른 등용)’가 새로운 관례로 정착할 경우 현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 포스트 시진핑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음.

-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서열 2위로 공개된 리창(李强, 현 상하이시 당서기)이 신임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주석(주석은 시진핑)으로 선출된 허웨이둥(何卫东)이 대만 지역을 작전 구역으로 포함하는 동부전구(东部战区, 인민해방군 5대 전구 중 동부에 위치한 전구)의 사령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안관계와 관련한 중국의 군사적 동향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당장(당헌) 개정] 당장에 ‘두 개의 확립(两个确立)’과 ‘두 개의 수호(两个维护)’가 명기되는 수정안이 전원일치로 통과되면서 시진핑의 절대 권력이 명문화되고, 중국식 현대화와 대만 독립 반대, 신발전구도, 중앙집중통일영도 등의 내용이 새로 삽입됨.

-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의미하며, 두 개의 수호는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 지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임.
 - 결국 두 개의 확립과 수호가 당 헌장에 삽입됨으로써 시진핑 총서기의 절대 권력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마오쩌둥에게 유일하게 붙여졌던 ‘인민 영수(領袖) 칭호가 시진핑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시진핑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도 ‘시진핑 사상’으로 개칭되지 않았음.
-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되었던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 신시대, 신과정에 서 중국공산당의 중심 임무”라는 내용이 당장에도 삽입됨.
- 경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더불어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노동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것”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당장에 삽입됨.
 - 2017년 개최된 19차 당대회의 당장 수정안에는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개선하며, 공급측·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음.
- 시진핑 총서기가 당대회 보고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결코 무력 사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이어, 당장의 수정안에도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됨.

2.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가. 정치·외교안보 분야

- [개요] 업무보고에 나타난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치국가 건설(7장) △국가안보·사회안정 수호(11장) △군 현대화 강화(12장) △일국양제 견지 및 조국통일 추진(13장)을 꼽을 수 있음.
- [법치국가 건설] 국민의 안녕과 당·국가의 장기 안정을 위해서는 법률에 의거한 국가 통치(依法治国)가 필요하므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과 법치국가 건설, 공정사회 보장 및 각 분야의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함.

- [국가안보·사회안정 수호]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민족 부흥과 강성한 국가의 기반으로 보고, 경제안전(안보)을 포함하는 각 분야의 안보 강화, 공공안전 수준의 제고 필요성을 강조함.
- [군 현대화 강화] 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임기의 마지막 해이자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군대의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 발전을 지속하고, 군사 이론·조직·인력·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함.
- [일국양제 견지 및 조국통일 추진]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일국양제(一国两制)³⁾ 제도를 견지 및 완비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힘.
- 이 외에 △전 과정 인민 민주 발전(6장) △문화 자신감과 영향력 강화(8장) △세계평화·발전 촉진으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14장) △엄격한 당 관리(15장)와 관련된 내용도 보고됨.

■ [법치국가 건설]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법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인민이 사회주의 법치를 잘 따르도록 법률 보급 및 법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완비] △헌법이 규정한 중국공산당 영도 지위, 인민 민주 독재(人民民主专政)의 국가 형태(國體)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 형태(政體)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중점 분야·신흥 분야·국제 분야 관련 입법 강화 및 국내 법치와 국제 법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입법 평가제도(备案审查制度)를 개선·강화할 계획임.
- [법에 의거한 행정 추진] 정부 기구·직능·절차·책임을 법제화해 행정효율과 신뢰를 높이고, 사업단위(事业单位)⁴⁾ 개혁 및 법률 집행(执法)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자 함.
 -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점 영역에 대한 법률 집행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집행 절차와 행정재량 기준을 정비하며, 법률 집행 감독 및 책임 추궁제도 강화
- [사법공정 강화] 사법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사법책임제를 전면 시행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권위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임.
 - 공안·검찰·심사판결 등 사법기관의 운영 규범화 및 상호 협력·통제 시스템 마련, 사법행위 감독 강화로 사법 정의 실현, 검찰기구의 법률 감독업무 강화, 공익소송 제도 완비
- [법치사회 건설 가속화] 도시·농촌 지역에 현대 공공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건설하고, 법치 홍보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의 법률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안보·사회안정 수호] ‘총체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⁵⁾에 입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보능력을 강화하며, 공공안전 및 사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3)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중국이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 받으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임. 즉 50년 동안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 완전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4) 사회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설립하거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사회 서비스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과 유사함.

5) ‘총체 국가안전관’은 2014년 시진핑이 제시한 안보관으로, 국가안보의 범위를 정치·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각 분야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함. 2015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을 정권과 주권, 통일, 완전한 영토,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 국가의 주요 이익이 국내외 위협에 처하지 않는 상태라 정의함. 김준영(2017), 「중국 국가안전법제의 체계 연구-신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Vol. 32, 통권 32호.

- [국가안보 시스템 강화] 당 중앙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안보 영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제 및 전략, 리스크 예측·경보 시스템과 응급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 특히 경제·핵심 인프라·금융·네트워크·데이터·바이오·자원·핵·우주·해양 관련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재·내정간섭·롱암법(Long-arm jurisdiction)⁶⁾을 반대하는 기제 마련
- [국가안보능력 강화] △정권·제도·이데올로기 △식량·에너지·중요 산업의 공급망 △해외 안전보장 능력 △중국 국민·기업의 해외 권익 △해양 권익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능력 강화, 적대세력의 침투와 전복·분열 행위를 타파할 계획임.
- [공공안전 거버넌스 제고] 공공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하고, 재해와 돌발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며, 중요 산업과 분야의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식품·약품·바이오 분야의 안전을 위한 감독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사회 거버넌스 체계 개선] 민원 업무를 개선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기층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치안을 강화하고자 함.

표 3. 시진핑의 군 발전전략(신시대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위한 새로운 3단계 발전전략)

구분	목표
1단계(~2020)	기계화 기본 실현 및 정보화 건설의 중대한 진전으로 전략능력 대폭 제고
2단계(~2035)	국방·군대 현대화 기본 실현: 국가 현대화와 보조를 맞춰 군사 이론·조직·인력·무기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
3단계(21세기 중엽)	전면적으로 '세계 일류 군대' 육성

주: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임.

자료: 人民网(2021. 3. 11), 「如何加速推进国防和军队建设 习近平强调新“三步走”战略」; 양정학(2021),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화와 지속」, 『현대중국연구』, 제32권 제2호.

■ [군 현대화 강화 건군 100년 분투 목표⁷⁾]를 실현하여 군 현대화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가속화하고자 함.⁸⁾

- 군사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 군대의 실전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정보화·스마트화 전쟁에 대비하고 전략전술 발전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 구축 △새로운 영역·성격의 작전 비중 제고 △무인·지능화 작전역량 강화 △인터넷 정보체계의 건설·운용을 통일적으로 계획
 - 군사훈련, 연합훈련, 대항훈련, 과학기술병 훈련을 심화하며, 군사력을 상시화(常态化)·다양화하고, 군사투쟁을 단호하고 민첩하게 전개하여, 안보태세를 조성하고, 위기와 충돌을 억제·통제하며, 국지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
- 군사 거버넌스를 강화해 국방개혁의 성과를 공고화·확대하고 군 편제와 군사정책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국방 과학기술 및 무기 분야에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해 과학기술의 전투력 전환을 가속화하고, 군사학교 개혁 및 신형 군사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며, 법에 따른 군사 기제 건설 및 전략 기획 강화

6) 관할권이 없는 다른 지역에 사법 관여를 확대하는 행위로, 중국정부는 미국의 「홍콩인권법」, 「위구르인권법」 등을 롱암법이라고 비판함.

7) 중국인민해방군은 1927년 창설되어 2027년에 건군 100년이 되는 해임. 시진핑은 2017년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군 발전전략을 공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언급함.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는 2035년 목표(군 현대화 기본 실현) 실행 전의 단기 목표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 않음. 양정학(2021),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화와 지속」, 『현대중국연구』, 제32권 제2호; 「방어 위주는 끝, 시진핑 강군 달라진다...美만큼 핵탄두 증강 [시진핑 시대②]」(2022. 10. 18), 『중앙일보』; CSIS(2022. 10. 19), 「China's 20th Party Congress Report: Doubling Down in the Face of External Threats.」

8) 군 현대화 분야는 <업무보고>에 별도의 소제목이 없음.

- 국가전략 시스템 및 능력 일체화를 위해 △군사 지역 전략 기획 통합·정책제도 연결·자원 공유 강화 △국방 과학기술공업 강화 △전 국민 국방교육 심화 및 국방 동원·예비역량 강화 △변경지역·해상·공중 방어 현대화 △퇴역군인 보장 강화 및 군·민 단결 공고화

■ [일국양제 견지 및 조국통일 추진] 홍콩과 마카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국양제’ 제도를 견지 및 완비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만의 독립 세력 및 외부의 간섭에 대해 경고함.

-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에 장기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중국정부는 두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애국자에 의한 홍콩·마카오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반중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해 견결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함.
- 대만 관련 내용의 핵심은 최대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의 옵션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2021년 11월 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역사결의’에 담긴 <신시대 대만 문제 해결에 관한 당의 총체방략(就新时代党解决台湾问题的总体方略)>의 내용이나 2022년 8월에 발표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의 통일사업(台湾问题与新时代中国统一事业)> 백서의 내용과 일치함.
 - 양안 동포는 한 가족이며,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92공식(九二共识)’의 기초 위에 대만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 또한 무력 사용의 옵션은 외부의 간섭 세력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세력을 향한 것이지 절대 다수의 대만 동포를 향한 것은 아니라고 부언
- 한편 대만 문제의 해결과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고 하면서,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방안이 양안 통일의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함.

■ [기타: 국제관계 관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및 발언권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문명 전파력과 미디어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주평등 외교정책, 평화공존 원칙에 따른 타국과의 우호 협력, 대외개방을 지속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담론(中国话语)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국이야기(中国故事)와 중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함으로써 호감 가고 신뢰·존경할 만한 중국의 이미지를 선보이며, 미디어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지위에 걸맞은 글로벌 발언권을 확보하고자 함.
- 각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하고, 패권주의·강권정치·냉전적 사고·내정간섭·이중잣대를 반대함.
- △대국과는 협조와 호혜적 상호작용(良性互动)을 통해 평화공존, 전반적인 안정, 균형발전을 추동하고 △주변 국과는 우호·신뢰·이익융합을 심화하며 △개발도상국과는 단결·협력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수호하고자 함.
-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간소화와 양자·지역·다자 협력을 지속하고 보호주의, 장벽 쌓기, 디커플링 및 일방적 제재·압박에 반대함.
- 진정한 다자주의와 국제관계 민주화로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이끌고, UN을 핵심을 하는 국제

9)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되, 여기서 중국이 무엇이나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내용으로 ‘一中各表(하나의 중국, 각자의 해석)’를 의미함.

시스템을 수호하며, 모든 형태의 일방주의와 특정국을 겨냥한 진영화 및 배타적 그룹 구성에 반대함. 또한 WTO·APEC 등 다자기구의 역할 및 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경제·사회 분야

■ [개요] 업무보고에 담겨 있는 경제·사회 관련 내용은 △신발전구도 구축(4장) △과학기술·인재 육성(5장) △공동부유(9장) △경제안전(안보)(11장)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음.

- 중국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임무로 경제발전 고도화'를 제시하고, '발전'을 국가부흥의 '제1임무'로 발표함.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기업을 통한 기술개발 생태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 분야별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 국제적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소득분배제도 개선, 취업 증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통하여 공동부유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신발전구도 구축]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의 정비, 그리고 농촌진흥과 지역발전, 대외개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발전구도 구축을 향후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이자 방향으로 설정함.

- [사회주의 시장 시스템 구축]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제도¹⁰⁾를 견지하고, 공유제 경제의 공고한 발전과 동시에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지도하며, 자원분배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가 보다 나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민영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국특색의 현대기업제도 보완, 기업가정신 양성,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지적권 보호·시장진입·공평경쟁·사회신용 등 시장경제 기본제도 개선
-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실물경제 발전을 경제발전의 중점으로 하고, 신형공업화를 추진하며, 제조강국·품질강국·우주항공강국·교통강국·네트워크 강국·디지털 강국을 건설하고자 함.
 - 전정특신(专精特新)¹¹⁾ 기업 육성, 제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녹색화, 전략적 자원 공급의 보장, 전략적 신항산업단지 발전, 첨단산업¹²⁾에서 경제성장 동력 마련
- [농촌진흥] 농촌진흥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가장 어렵고 엄중한 임무로,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고수하고 빈곤퇴치 성과를 공고히 하여 농업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자 함.
 - 농촌의 산업·인재·문화·생태환경·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지 18억 묘(亩) 레드라인 견지 및 농업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토대를 마련하며, 향촌 특색산업 개발 및 농촌 토지제도 개혁,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
- [지역발전] 지역균형 발전전략, 지역 중요 발전전략, 주체 기능구(主体功能区)¹³⁾ 전략, 신형도시화 전략을

10) 19기 4중전회(2019년 10월 28일~31일)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주의 경제 기본제도는 공유제를 메인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 노동에 따른 분배를 메인으로 다양한 분배방식의 공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등을 의미함. 中国共产党新闻网(2019. 12. 16), 「正确理解我国社会主义基本经济制度」, <http://theory.people.com.cn/n1/2019/1216/c40531-31507170.html>(검색일: 2022. 10. 21).

11) 전정특신(专精特新)이란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참신화를 의미함.

12)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녹색산업 등.

13) 지역별 자원환경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특정 기능 발전전략을 의미함.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중요 생산력의 배치를 개선하여 상호보완적이고 고품질 발전이 가능한 지역 경제구조와 국토 공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대외개방 확대]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의 장점을 살려 국내대순환을 통한 글로벌 자원요소 유입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의 자원연동 효과를 강화함으로써 무역투자 협력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과 디지털 무역 발전을 통한 무역 강국을 건설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고품질 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의 지역 개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국제경제 구도를 유지

■ [과학기술·인재 육성] 과학과 인재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전략의 기반으로 삼고, 과학을 ‘제1생산력’, 인재를 ‘제1자원’, 혁신을 ‘제1동력’으로 규정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임.

-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혁신’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핵심적 지위로 설정하고, 전략적 과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 효율을 향상하며, 경쟁력 있는 개방·혁신 생태계를 형성할 예정임.
 - 국가연구기관과 연구형 대학, 과학기술 선도기업을 연계한 국가실험실 시스템을 형성하고, 과학기술 기초 역량과 과학기술 전략자문을 강화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학기술 평가 시스템 개혁 등 전면적인 혁신 기초 인프라를 형성
- [발전 신동력 창출] 국가 전략 수요를 기반으로 원천적 과학기술과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략적·종합적·미래지향적인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인재강국 건설] 당의 인재관리 원칙에 따라 △노동·지식·인재·창의성을 존중하고 △적극적·개방적·효율적인 인재정책을 실행하며 △인재의 전략적 배치 개선과 △국제사회 내 중요 인재 허브 및 혁신고지 건설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인재 분야의 우위를 형성하고자 함.
 - 분야별 최고 전문가, 전략분야 과학자, 일류 과학기술 선도인재, 과학기술 청년인재, 엔지니어, 첨단기술 인재 양성

■ [공동부유] 분배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취업, 사회보장제도, 의료자원 개발, 의료보장정책을 통해 분배의 균형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추진하고자 함.

- [분배제도 개선] △분배제도를 공동부유의 기초제도로 추진하고 △노동 기반 분배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을 접목함으로써 균형적인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를 추진하며 △공평한 노동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꾀함.
 - 개인소득세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분배 절차, 재산축적 메커니즘 규범화, 합법소득 보호, 기업·조직·개인 의 공익자선사업 지원 등 추진
- [취업우선전략 실행] 민생의 기본인 취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업우선정책을 강화하고, 건전한 취업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품질의 취업 기회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임.
 - 중요 노동인구의 취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취업지원정책을 추진하며, 인재 유동성을 제약하는 시스템을 개선, 또한 창업을 통한 취업증진으로 새로운 취업 형식을 지원하고 규범화

- [사회보장제도 구축] 민생과 사회의 안정화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 국민·전 지역을 아우르고, 공평·통일·안전·규범·지속가능의 방침에 따른 다층화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기본 의료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의 성(省)급 관리를 추진하여 기본 양로·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보장 제도를 확대하여 타지역 의료비 결산, 장기 간호보험 제도를 구축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다방면의 공급을 통하여 주거보장을 실행
- [건강중국 건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고, 출산 촉진, 노령화 대응, 의료자원 균형 발전, 공익성 공립병원 개혁, 방역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의료자원 개발 및 의료보장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다. 지방 당대회의 주요 내용

■ 당 중앙의 당대회에 앞서 각 지방에서도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에 걸쳐 지방 당대회가 개최됨.

- 지방 당대회의 업무보고 내용은 중앙 당대회의 업무보고 내용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키워드들이 함께 제시됨(표 4 참고).

표 4. 31개 성급 지방 당대회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지역	개최 기간	향후 5년의 중점 업무 중 강조 내용
신장	2021.10.21~25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 안정' 유지
산시(山西)	2021.10.25~29	현대 산업체계 구축: 전통 우위산업 개조와 전략적 신흥산업의 클러스터화 병행
허난	2021.10.26~29	국가 혁신고지 건설과 현대 산업체계 구축 가속화
안후이	2021.10.28~31	과학기술 혁신과 신흥산업 클러스터 구축
장시	2021.11.23~26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망·공급망의 현대화 추진
장쑤	2021.11.24~27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위한 선행적인 시범사업 추진
후난	2021.11.25~28	현대 경제체제 구축 가속화와 경제 혁신·경쟁력 강화
광시	2021.11.25~28	중국-아세안 운명공동체 건설과 공동부유 추진
허베이	2021.11.26~29	경제 강성(強省) 및 아름다운 허베이 건설 가속화
푸젠	2021.11.26~29	전방위적인 고품질 발전 추진: 경제발전, 개혁개방, 사회문명, 생태문명 민생복지, 거버넌스의 업그레이드 추진
네이멍구	2021.11.27~30	생태 우선 및 녹색발전 중심의 고품질 발전
윈난	2021.11.27~30	민족단결, 생태문명, 동남아 지역협력 전략 추진
시장	2021.11.27~30	민족단결, 고원(高原) 경제, 생태문명, 국경 건설 프로젝트 전략 추진
랴오닝	2021.12.15~18	혁신주도 발전전략 견지
구이저우	2022.4.25~28	새로운 서부대개발, 농촌진흥, 디지털 경제, 생태문명 전략 추진
하이난	2022.4.26~29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가속화
헤이룽장	2022.4.29~5.2	혁신주도 발전전략과 농업 현대화 추진
광둥	2022.5.22~25	전면적인 개혁·개방 확대
칭하이	2022.5.23~26	현대 산업체계 구축, 생태우선·녹색발전 중심의 고품질 발전 추진
쓰촨	2022.5.27~30	청위지역 쌍성경제권 건설을 통한 지역협조 발전 추진
산시(陝西)	2022.5.27~30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한 현대화 경제 시스템 구축
간쑤	2022.5.27~30	청정에너지와 신소재 기지 및 서부 과학혁신센터 구축
충칭	2022.5.27~31	내륙지역의 개방 고지와 청위지역 쌍성경제권 건설 추진
산둥	2022.5.28~6.1	경제발전, 민생, 사회 문명·통치, 생태환경에서의 새로운 도약

지역	개최 기간	향후 5년의 중점 업무 중 강조 내용
닝샤	2022.6.10~13	황하유역 생태보호와 선행구 건설을 통한 고품질 발전 추진
톈진	2022.6.16~20	사회주의 현대화 대도시 건설
후베이	2022.6.18~21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위한 국가 선행구 건설 추진
지린	2022.6.19~22	현대 산업체계 구축 가속화, 혁신형 성(省) 건설 추진,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
저장	2022.6.20~22	공동부유 및 현대화 선행(先行) 추진
상하이	2022.6.25~27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대도시 건설 가속화
베이징	2022.6.27~30	새로운 시대의 대대적인 수도(首都) 발전 추진

자료: 31개 지방정부 당대회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시진핑 3기의 통치 엘리트

■ 16기(2002년, 후진타오 1기)와 17기(2007년, 후진타오 2기), 18기(2012년, 시진핑 1기), 19기(2017년, 시진핑 2기)와 비교하면 20기(2022년, 시진핑 3기) 중앙정치국 위원에게서 통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표 5. 시기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비교

구분	16기(후진타오 1기)	17기(후진타오 2기)	18기(시진핑 1기)	19기(시진핑 2기)	20기(시진핑 3기)	
위원 수(명)	24	25	25	25	24	
평균 연령(세) ※선출연도 기준	60.7	61.8	61.2	62.5	63.6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평균 연령(세)	61.7	62.3	63.4	62.9	65.2	
최종 학력	학사(명)	20	16	10	4	3
	석사(명)	4	5	10	14	11
	박사(명)	0	4	5	7	10
여성(명)	1	1	2	1	0	
한족 비율	96%	96%	100%	100%	100%	
공청단 출신(명)	6(25%)	8(32%)	9(36%)	6(24%)	1(4%)	
신임 위원(명)	16(67%)	10(40%)	15(60%)	15(60%)	13(54%)	
칭화대 출신(명)	5	3	2	4	5	
학위과정 해외 유학 경험자(명) ※홍콩·마카오·대만 포함	3	1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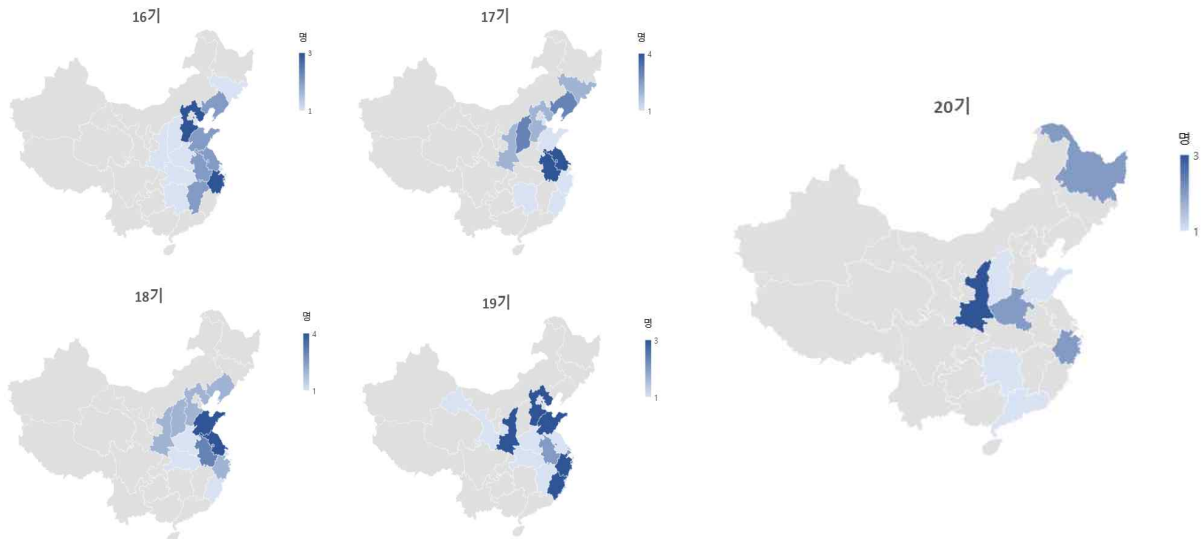
자료: 데이터는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와 중국공산당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저자 작성.

- 중앙정치국 위원의 인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난 네 차례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짐.
 - 특히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평균 연령이 65.2세로, 과거에 비해 비교적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인선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례로 여겨졌던 '7상8하'가 깨짐에 따라 연령 제한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통치 엘리트의 평균 연령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됨.

- 그동안 통치 엘리트의 최종 학력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온 가운데, 이번 20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10명(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통치 엘리트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20기 중앙정치국 위원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는 이(理)·공(工)학, 경제학, 행정학 전공자가 부각됨.
- 중국에서 정치세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청단 세력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임.
- 여성 및 소수민족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통치 엘리트의 남성 중심, 한족 중심 경향이 더욱 심화됨.
- 역대 중앙정치국 위원의 출생지는 동부 지역에 집중된 가운데, 시진핑 집권 2기(19기)와 3기(20기)에서는 산시성(陝西省)에서 출생한 위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고).
 - 시진핑 총서기의 출생지가 산시성 푸핑현(富平縣)으로, 20기 중앙정치국 위원의 출생지 분포와 시진핑의 출생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임.
- 20기 중앙정치국 위원이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역(성급 이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장성(浙江省)과 푸젠성(福建省), 상하이시(上海市)에서의 근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고).
 - 저장성과 푸젠성, 상하이시 또한 과거 시진핑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연고지를 매개로 한 시진핑과 20기 통치 엘리트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음.

그림 3. 시기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출생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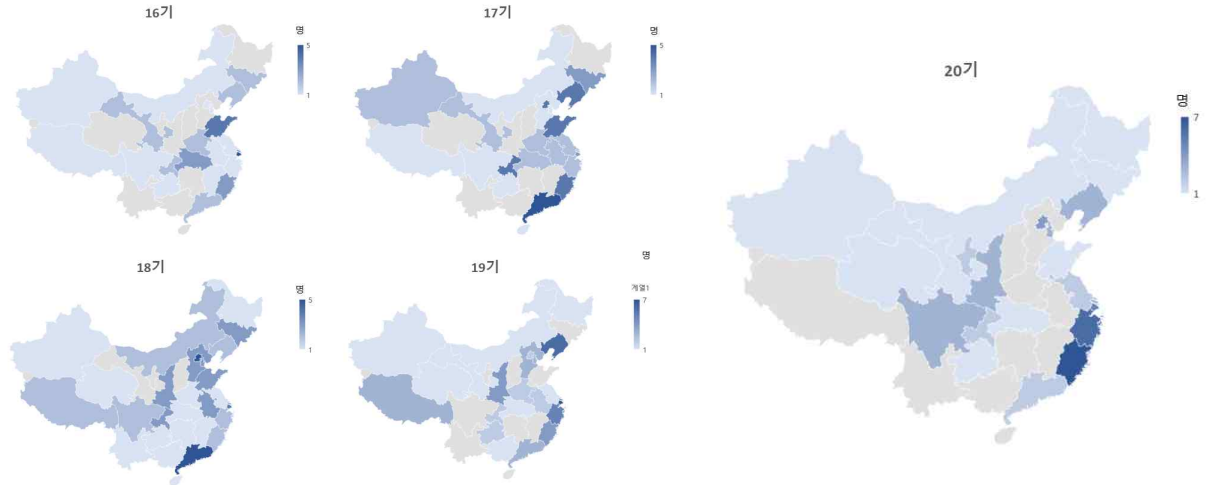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시기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근무경험 지역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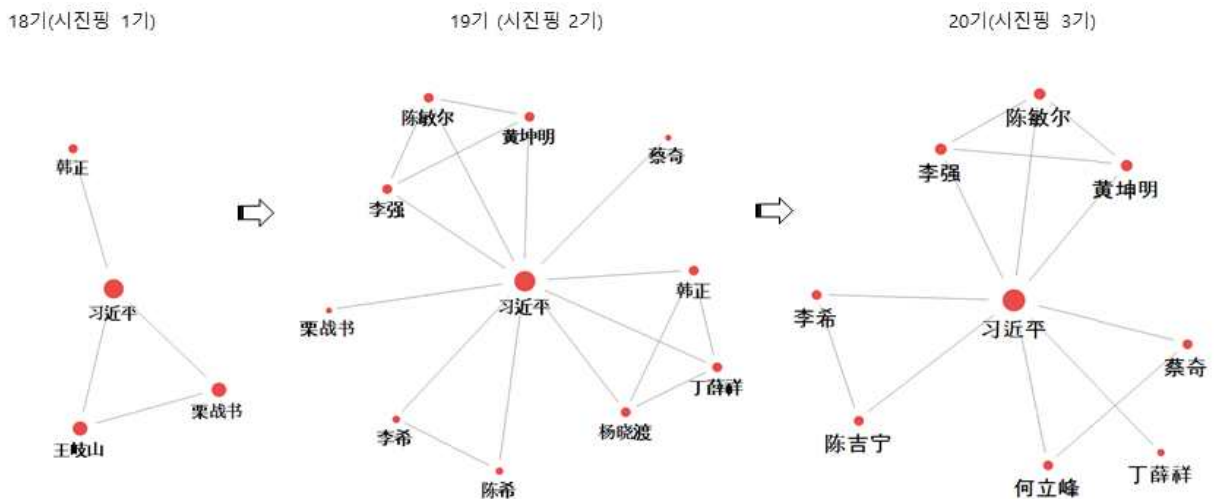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시진핑 1기에 비해 2기와 3기로 가면서 중앙정치국 내부의 시진핑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됨.

- 산시성(陕西省) 옌촨현(延川县)과 허베이성 정팅현(正定县),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에서의 근무 경험 및 칭화대(학부, 석·박사)에서의 인연 등을 바탕으로 중앙정치국 내부의 시진핑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시진핑 1기보다 2기, 3기에서 네트워크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음(그림 5 참고).
- 즉 시진핑 1기에 비해 2·3기의 중앙정치국에 시진핑의 측근이 더 많이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5. 중앙정치국 내부의 시진핑 인적 네트워크(18·19·20기 비교)



자료: 근무지 및 학창 시절의 관계를 조사한 SCMP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

- 리창(李强), 천민얼(陈敏尔), 황쿤밍(黄坤明) 등 저장성 근무시절 관계를 맺은 인물들이 시진핑 2기부터 중앙 정치국에 등장했고, 이번 시진핑 3기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 한편 시진핑이 푸젠성 근무시절 관계를 맺은 인물 중에서는 시진핑 2기의 차이치(蔡奇)와 함께 이번 3기에는 허리핑(何立峰)도 중앙정치국에 진입함.
- 반면 상하이시 근무시절에 관계를 맺었던 한정(韩正)과 양샤우두(杨晓渡), 덩쉐상(丁薛祥) 중에서는 덩쉐상만이 시진핑 3기에 남았는데, 이는 한정(68세)과 양샤우두(69세)의 연령이 67세를 넘겼으나 덩쉐상은 아직 60세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인선에서 시진핑(69세)과 장여우샤(张又侠, 72세), 왕이(王毅, 69세)와 같이 ‘7상8하’의 관례가 깨진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7상8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 중에서 연령이 57세 이하인 인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진핑의 후계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시진핑이 향후 10년을 더 집권하고, ‘7상8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인사 관례로 작동한다고 할 때, 최소한 2022년 현재 57세 이하인 중앙정치국 위원이 유력한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일 수 있으나 존재하지 않음.
-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시진핑이 5년만 더 집권하거나 시진핑의 후계자도 ‘7상8하’의 관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5년 또는 10년 후에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로서 현재 62세 이하인 중앙정치국 위원이 유력할 수 있음(표 6 참고).

표 6. 연령이 62세 이하(2022년 기준)인 중앙정치국 위원

성명	연령	현직	시진핑과의 주요 인연
천원칭(陈文清)	62	중앙서기처 서기, 국가안전부 당서기	
천민얼(陈敏尔)	62	충칭시 당서기	저장성 근무
덩쉐상(丁薛祥)	60	중앙서기처 제1서기	상하이시 근무
인리(尹力)	60	푸젠성 당서기	
리우궈중(刘国中)	60	산시성(陕西省) 당서기	
위안자쥘(袁家军)	60	저장성 당서기	
리간지에(李干杰)	58	중앙서기처 서기, 산둥성 당서기	
리슈레이(李书磊)	58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선전부 부부장	
장궈칭(张国清)	58	랴오닝성 당서기	
천지닝(陈吉宁)	58	베이징시 당서기	칭화대 박사과정

주: 연령은 2022년 10월 기준.
자료: 저자 작성.

- 20기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들어간 57세 이하 인물도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로서 가능성이 있음.
- 시진핑이 향후 10년을 더 집권하고 ‘7상8하’가 여전히 인사 관례로 작동한다고 했을 때, 20기 중앙위원회 위원 중 57세 이하의 인물(22명)¹⁴⁾이 5년 후에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고 10년 후에는 중앙정치국 상

14) 왕즈쥘(王志军, 57, 헤이룽장성 당 부서기), 왕셔우원(王受文, 56, 상무부 당 부서기), 예젠춘(叶建春, 57, 장시성 당 부서기), 리우웨이(刘伟, 57, 지린성 당 부서기), 쉬쿤링(许昆林, 57, 장쑤성 당 부서기), 리러칭(李乐成, 57, 랴오닝성 당 부서기), 우샤오쥘(吴晓军, 56, 칭하이성 당 부서기), 루하오(陆昊, 55,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주임), 천강(陈刚, 57, 중화전국총공회 당서기), 저우주이(周祖翼, 57,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당서기), 멩판리(孟凡利, 57, 광둥성 당 부서기), 자오룽(赵龙, 55, 푸젠성 당 부서기), 자오강(赵刚, 54, 산시성(陕西省) 당 부서기), 자오이더(赵一德, 57, 산시성(陕西省) 당 부서기), 쑹샤오쥘(钟绍军, 54, 중앙군사위 판공청 주임), 허쥘커(贺军科, 53,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천강(秦刚,

무위원으로 고속 승진할 경우 시진핑의 후계자로서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연령과 함께 근무경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되어 후계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임.

4. 전망 및 시사점

■ 20차 당대회를 통해 2021년 ‘14차 5개년 계획(14.5계획)’에서 제시했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 목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난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성을 전망하고 그에 맞춘 중국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경제발전 목표는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18차, 2012년) → ‘신발전이념 관철, 현대화 경제 시스템 구축(19차, 2017년) → ‘신발전구도 구축, 고품질 발전 추진(20차, 2022년)’으로 변화하는 등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¹⁵⁾
- 신발전구도 구축을 위하여 제시한 ‘6+1+1’ 구조의 ‘강국전략’은 중국이 금세기 중반까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던 ‘현대화 강국 건설’¹⁶⁾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6+1+1’의 중국식 현대화 강국전략 중 ‘6’은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항공강국 △교통강국 △네트워크 강국 △디지털 강국을 의미하며(4장 1절), 첫 번째 ‘1’은 농업강국을(4장 2절), 두 번째 ‘1’은 무역강국을 의미함(4장 4절).
- 중국이 이번 ‘강국전략’에 따라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유연한 중국시장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전정특신’과 같은 자국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내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자체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대중국 진출전략을 점검해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중국이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디지털, 녹색,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개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기회 요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중국의 지역균형 발전전략과 지방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지역 맞춤형 대중국 진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에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재양성 분야에서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이를 양국 관계의 발전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56. 중화인민공화국 주미대사, 스용(殷勇, 53, 베이징시 당 부서기), 황젠파(黄建发, 57, 저장성 당 부서기), 창팅치우(常丁求, 55,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사령관), 청리화(程丽华, 57, 안웨이성 당 부서기), 신하이승(慎海雄, 55, 중선부 부부장).

15) 光大证券(2022. 10. 16), 「高质量发展是中国式现代化的首要任务——《二十大报告》精神学习第二篇」, p. 3.

16) 2021년 양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 2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발표하고, 20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으로 실현하고, 2035년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신발전단계 목표를 발표함. 문지영 외(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04.

- 과거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였다면, 이번 당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과학기술 전략은 ‘3개의 제일’, ‘3개의 전략’, ‘3개의 강국목표’로 요약되며, 핵심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한 혁신 추진임.
 - ‘3개의 제일’은 과학을 ‘제1생산력’, 인재를 ‘제1자원’, 혁신을 ‘제1동력’으로 규정한 것을 의미하고, ‘3개의 전략’은 과학교육 국가부흥 전략, 인재강국 전략, 혁신 주도 발전전략을 의미하며, ‘3개의 강국목표’는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의미함.
- 중국이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협력 가능 분야에서 한·중 간 인재교류 및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이를 양국의 경제협력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한중 인재교류와 학술교류를 통해 얻은 과학기술 혁신 내용을 양국의 경제분야에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발전, 한중관계를 모두 추동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민생분야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분배제도 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중산층 육성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및 대비가 필요함.

- 이번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2021년 8월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동부유의 개념을 공론화한 이후 가장 구체적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3월 양회에서는 공동부유에 대하여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한 차례만 언급하였으나, 이번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분배 제도, 취업지원정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 중국이 추진하는 공동부유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제영역 및 충격 정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법치 중국’이 재차 강조되면서 향후 각 분야의 법제도 신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것이 우리 기업의 대중국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의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양면적 성격을 가져 정치제도화라는 순기능도 있으나, 공산당 집권 통치의 도구로 법을 이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받음.¹⁷⁾
 - 예를 들어 중국은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통해 반부패 사업과 관련된 당내 감독·국가 감찰기능을 통일시킴으로써 부패척결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직접적 관리 및 통제 범위를 강화하는 효과도 거둠.¹⁸⁾
- 중국은 2021년 「법치중국 건설계획(2020~2025)」을 발표해 인터넷 금융·AI 등 정보기술 분야 입법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생태환경·안전생산 등 분야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17) 황태연(2020),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권위주의적 통제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3호; 강광문(2022), 「2018년 중국의 헌법 개정과 감찰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중국식 법치의 개념을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제49집; 조영남(2011), 『중국의 법률보급 운동』.

18) 황태연(2020), 「중국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특징: 권위주의적 통제강화와 법·제도화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제22권 제3호.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법제도 환경 변화에 주의가 필요함.¹⁹⁾

- 예를 들어 중국은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해 애플社 중국법인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올해 1월부터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을 시행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²⁰⁾

■ 향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긴장 국면이 지속 또는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대만해협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대만과의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건'으로 재차 규정함에 따라 대만 통일의 시간표가 간접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이 곧 중국몽(中国梦)이라고 규정했고, 이를 위해 두 개의 백 년 분 투목표를 설정했으며, 그 두 번째 백 년인 2049년까지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음.
 - 대만과의 조국 통일이 중국몽 실현의 필요조건이라고 했을 때 2049년까지 대만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며, 이러한 시간표에 따라 향후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만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단기간 내에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무너지는 경우 대만해협에서 국지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국방 능력과 대만의 방어력, 그리고 미국의 개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분간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전면 침공하여 무력통일을 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²¹⁾
 - 다만 2027년 창군 100주년을 맞는 중국이 군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헌법을 개정하여 독립을 법제화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은 본토와 밀접해 있는 대만의 진먼(金門)섬 또는 마쭈(馬祖)섬 등을 대상으로 국지적인 무력 침공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²²⁾
- 대만 유사시 △대만해협 부근의 해상 교통로 마비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 △북한의 군사 동향에 영향을 줄 우려 등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시진핑 3기의 외교·경제 엘리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 및 차세대 핵심 엘리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네트워킹이 필요함.

- 20차 당대회 및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에 대한 권력 집중이 더욱 명확해진 반면, 시진핑의 뒤를 이을 후계자 구도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임.
 - 비록 시진핑 1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될 리창과 상무부총리를 맡게 될 덩쉐샹, 그리고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한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 등 시진핑 3기의 경제 엘리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중국경제를 전망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19) CSF(2021. 1. 12), 「중 중앙정부, 법치중국 건설 계획 발표」.

20) 디지털데일리(2021. 10. 22), 「中, 애플에 "데이터 넘겨라" 압박 수위 높여」.

21) CSIS, "Surveying the Experts: China's Approach to Taiwan," <https://chinapower.csis.org/survey-experts-china-approach-to-taiwan/> (검색일: 2022. 10. 21).

22) *Ibid*

- 또한 연령 제한을 깨고 왕이(王毅, 69세) 외교부장이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면서 양제츠(杨洁篪)에 이어 향후 중국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왕이에 대한 심층적인 인물 분석도 필요함.
- 한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7상8하'의 인사 관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의 5년 연임, 10년 연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 포스트 시진핑의 후보자를 분석 및 관찰하고,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한중관계의 인적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57세 이하의 중앙위원회 위원(22명) 중에서 향후 고속 승진을 하면서 중앙당교 교장, 중앙서기처 서기, 부주석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인물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임.

■ 당대회 보고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요구됨.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와 '글로벌 안전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议)', '경제안전(经济安全)' 등의 개념이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새롭게 등장함.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全球发展倡议)'는 시진핑 주석이 2021년 9월 제76회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이후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대일로와 글로벌 버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제사회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역시 당대회 보고의 형식으로는 처음으로 이를 언급했는데, 경제안보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중국이 향후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며 정책화할 것인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KIEP**